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보고서]

2021. 11. 5. (금)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10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 · 장소

2021년 11월 4일(목) 본관 3층 제1회의실 15:00~17:30

☐ 위 원

- 노측 : 강성원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최광호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이영일 노측 공정방송위원 (KBS 노동조합 / 미참석)
우한울 노측 교체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이영풍 노측 교체위원 (KBS 노동조합)
- 사측 : 임병걸 부사장
한창록 편성본부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박현민 멀티플랫폼전략국장(교체위원)
안양봉 취재1주간(교체위원)
박유한 취재2주간(교체위원)

☐ 안 건

- <시사기획 창>의 편성 변경 논란 관련 건
- 2021년 9월 7일 <KBS 뉴스 9 / 검찰, 이재명 강압수사 의혹> 보도 건

☐ 논의 내용

제297차 공방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사기획 창>의 편성 변경 안에 대한 건과 지난 9월 방영된 이재명 강압수사 의혹 보도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사측은 이번 공방위가 현 KBS 집행부의 마지막 공방위가 될 것 같으며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생산성 있는 자리,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노측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편성 사례에 대한 논의가 아닌 편성 전략 자체에 대한 논의여야 한다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1. <시사기획 창>의 편성 변경 논란 관련 건

노측은 <시사기획 창> 편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년간 3번째로 반복돼 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편성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제작 실무진의 권한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편성규약 7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직무재설계 과정이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로도 연결됐던 상황에서, 또다시 창 편성 이동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이를 절박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먼저 편성 변경 시점이 12월 11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5년만에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하드라마를 만드는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올해 대하드라마를 약속했던 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12월 중 시작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가능성은 7~80%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몰린 상황 등을 고려해 편성 시기를 내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관련 제작진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하드라마 편성시간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 임원 티타임에서 일부 논의됐고 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편성 영향권의 프로그램 제작진에는 직접 이야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남은 시간이 없다며 과거 6주 논의 수준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됐던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근 갯파더, 개승자 등 신규 프로그램 조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편성 2주 전에서야 최종안이 확정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설 프로그램 편성 변경 논의는 통상 6~7주 전에 시작하고 <시사기획 창>관련 절차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노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의 전략, 판단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과거 평일 편성되던 <창>을 주말로 옮기면서 편성 측이 '주말로 이동시 3050 시청률이 더 많다' 등을 주장했지만 3050 시청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편성 전략의 실패가 있었고, 2015년에는 시사프로그램 억압을 위한 편성 변경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 프로그램을 옮기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에서는 과거 2015년 편성변경 시도 등에서는 정치적 맥락이나 고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맥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창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이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불이익이나 무시의 취지 역시 없다고도 덧붙였다. 임원회의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먼저 국장 레벨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노측은 현 사장 체제에서 3번째 일방 편성통보로 제작진의 상실감이 큰 만큼, 편성 전략의 수립 과정, 과거 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하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또한 상위 레벨의 논의 진행을 위해 국장단 레벨의 논의 시한을 11월 18일 정도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해당 제안들을 수용한다면, 단계별로 논의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 2021년 9월 7일 <KBS 뉴스 9 / 검찰, 이재명 강압수사 의혹> 보도 건

노측에서는 해당 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이 제보자와 주고받은 편지 사본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사측이 응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제출 자료를 받으려는 근거를 먼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요청된 자료가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자료 수천페이지 등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이라며, 구성원들의

제작자유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해당 보도 과정에서 제보자가 조직 폭력배 출신이라는 사실 등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 뒤 검찰의 반론 역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에 왜 민변 소속이 많은지도 물었다.

사측에서는 출연 과정에서 제보자의 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사안의 본질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반론 부분은 사전 취재 과정에서 충실히 듣고자 노력했고 이를 기사에 담았으며, 추후 검찰의 반론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반론청구 등을 하지 않았고, 반론은 충실히 다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련 문제제기를 해왔던 전문가들로 구성했을 뿐, 출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이 보도의 분량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점과 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블록편집이 강화되는 현 뉴스편집 특성상 10분 이상의 블록은 지금도 자주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 보도의 순기능이 있고, 보도의 본질과 다른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의도를 덧씌우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